

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최 환 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최 환 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요약	i
1 대외 경제 전망	1
2 대내 경제 전망	6
3 중소기업 경기 전망	12
4 정책적 제언	14
참고문헌	23

요 약

최근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교역 확대, 소비·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OECD가 집계하는 주요 45개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는 등 경기 개선이 주요 지역에서 전반적이고(broad-based)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복 흐름에 바탕하여 IMF는 금년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6%, 3.7%로 전망하였다.

세계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 속에 한국 경제 역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3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시현하면서 한국 경제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3%대의 성장률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기회복을 이끌어 왔던 투자의 활력은 점차 둔화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경기 역시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발생 우려는 여전히 높다. 투자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 부문의 회복이 더딜 경우 경제 전체의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한계가구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조정 압력이 확대되고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산성 하락과 잠재성장률 둔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리인상에 따른 한계가구 지원 대책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 여건 악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그 외 신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최 환 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 대외 경제 전망

□ 2017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확장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3.6%(IMF 기준)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확장국면이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OECD가 집계하는 주요 45개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는 등 경기 개선이 주요 지역에서 전반적이고(broad-based) 완연하게 나타나는 모습
 - 또한 지난 해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 유가는 최근 6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상향돌파 하였고, 철강과 전자부품 등의 주요 제조업 제품단가 역시 하락세에서 반등
- 이러한 흐름에 바탕하여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4%에서 3.6%로 상향조정

〈표 1〉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세계	3.4	3.2	3.6	3.7
선진국	2.2	1.7	2.2	2.0
미국	2.9	1.5	2.2	2.3
일본	1.1	1.0	1.5	0.7
유로지역	2.0	1.8	2.1	1.9
한국	2.8	2.8	3.2	3.0
신흥국	4.3	4.3	4.6	4.9
중국	6.9	6.7	6.8	6.5
인도	8.0	7.1	6.7	7.4
아세안5	4.9	4.9	5.2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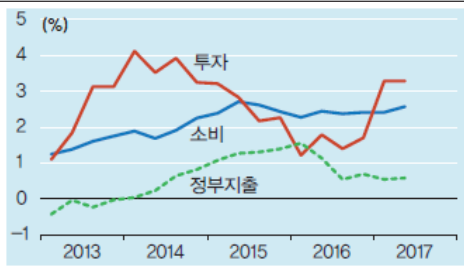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주: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포함

○ 최근의 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 요인에 기인

- OPEC 산유국들의 감산 노력과 중국 철강, 전자부품 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능력 감축 등으로 글로벌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
- 이로 인해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0%대에 머물던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 신흥국 역시 주요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락세가 둔화되고 소비수요가 회복

〈그림 1〉 세계경제 수요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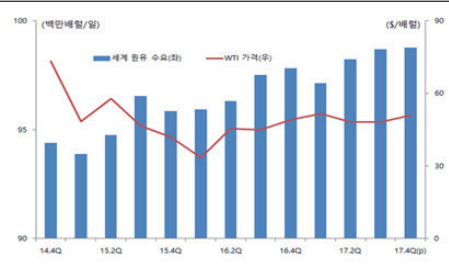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LG경제연구원

주1: 주요 33개국의 국민계정상 불변기준 소비, 투자 및 정부지출의 증가율 가중평균값

주2: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그림 2〉 세계 원유 수요 및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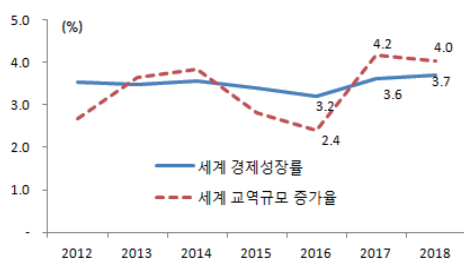
자료: U.S. EIA

주: 2017년 4분기는 추정치

○ 공급조정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세계 교역이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가속화

- 공급 조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하였고, 늘어난 이윤을 바탕으로 재고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설비투자 수요가 확대
- 또한 미국의 내구재 소비 사이클이 개선흐름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
- 수요 확대에 따른 세계 교역 회복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과 기업매출,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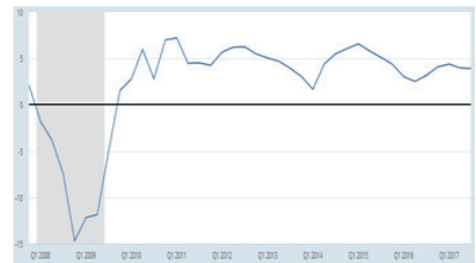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규모 증가율



자료: IMF, 2017년 이후는 IMF 전망치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그림 4〉 미국 내구재 소비 성장률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주: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 2018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교역 확대, 주요국의 소비·투자심리 회복 등에 바탕하여 IMF는 금년 10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상향조정
 - 선진국은 전반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상승흐름이 소폭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개선폭이 확대되면서 성장모멘텀이 강화될 전망
- (선진국) 완전한 회복세 속에 상승흐름은 소폭 둔화될 전망
 - 미국*, EU: 고용시장 여건과 소비·투자심리 개선, 우호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 * 최근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4.5%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역시 견조하게 회복되는 모습
 - 일본: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당분간 법인세율 인하, 규제 개혁 등의 정책이 지속될 전망
 - 다만 주요 선진국 경기의 순환적 하락세는 멈추었지만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견인할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승흐름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개선폭이 확대되면서 성장모멘텀 강화
 -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주도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6% 중반대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인도: 2019년 총선을 대비하여 모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주요 자원 수출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자원 수출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통화가치와 물가가 안정되면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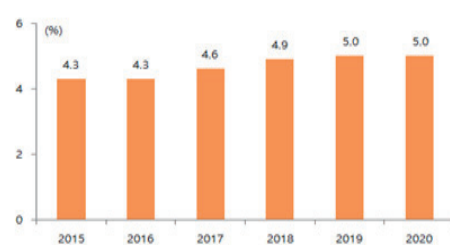
〈그림 5〉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주: 2017년 이후는 IMF 전망치

〈그림 6〉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주: 2017년 이후는 IMF 전망치

□ 한편 국제 유가는 50달러 중후반대를 중심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지정학적 요인 및 금융 요인 등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최근 국제 유가는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대체적인 상승 흐름을 시현
 - 2016년 역대 최저치인 20달러대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작년 하반기 이후 50달러대를 회복하였다가 최근 60달러를 상향돌파
 -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추세는 달러 약세 기조에 더해,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수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중국 전략 비축유 확대, 계절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원유 가격 상승을 견인
 - (공급 측면) OPEC 원유 생산량 감산,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한 美 원유 생산시설 가동률 하락, 시추공 수 감소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 감산 합의 이행

- OPEC 회원국과 비OPEC 10개 산유국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유 생산 감산에 합의
- OPEC의 감산 목표(1,178천b/d)에 대한 1~10월 평균 감산준수율은 100%에 근접하고, 동기간 비OPEC의 감산준수율도 81%를 기록하는 등 당초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준수율을 기록하면서 원유 가격 상승을 주도

- 내년 국제 유가는 2017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50달러 중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지정학적 요인과 금융 요인의 영향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표 2〉 주요 기관의 국제 유가 전망(\$/b)

전망기관	전망 유종	2016	2017(E)	2018(F)
EIA (2017.11)	브렌트	43.74	53.01	55.61
	WTI	43.33	49.70	51.04
IHS Energy (2017.11)	브렌트	43.65	52.87	54.17
	WTI	43.26	49.74	51.36
	두바이	41.31	51.84	52.81
EIU (2017.11)	브렌트	44.05	53.03	54.00
	WTI	43.19	50.08	50.78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11)	두바이	41.41	52.76	54.88

자료: EIA, IHS, EIU, 에너지경제연구원

□ 그러나 완전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의 절대적 수준이 제한적이고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

-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동반확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의 절대 수준은 예전보다 낮은 모습
 - 현재 경기 개선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년(1999~2008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 (4.2%)에 비해 여전히 낮고,
 - 주요 선진국들의 임금상승률과 인플레이션 회복 속도도 아직까지 느린 수준을 유지
 - 또한 글로벌 자산가격의 높은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회복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 (선진국 통화정책 방향)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의 시장 유동성 축소 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과 시장 간의 인식 괴리가 크게 나타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확대) 최근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 기조 역시 세계 교역 회복을 제한하면서 경제 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음
- (중국 경제의 높은 부채 비율) 중국 부채 규모가 GDP대비 200%를 상회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부채 누적에 따른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
 - 최근 무디스에 이어 IMF 역시 중국 은행권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 (구조적 문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국가 간 분업 약화, 주요 국가 내에서 예상보다 더딘 가계구매력 회복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대내 경제 전망

□ 2017년 한국 경제는 연간 3%대의 성장을 달성이 가시화되는 모습

- 한국 경제는 3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시현하면서 2014년 이후 3년만에 연간 3%대 성장을 달성이 가시화
- 네덜란드(3.1%), 독일(2.1%), 미국(2.2%), 영국(1.7%), 일본(1.5%)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IMF 기준)

〈표 3〉 주요 기관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6	2017(E)	2018(F)
IMF	2.8	3.2	3.0
OECD	2.8	3.2	3.0
한국은행	2.8	3.0	2.9
한국금융연구원	2.8	3.1	2.8
포스코경영연구원	2.8	3.0	2.9
IBK기업은행	2.8	3.0	2.7
NH투자증권	2.8	3.0	3.0
중소기업연구원	2.8	3.1	3.2

자료: 각 기관 보고서 및 전망 자료

- 이는 세계 경제 회복 기조와 유사하게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
 - 2015년 이후 건설투자가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을 주도해왔으며, 올해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냄
 - 실제 금년 상반기 국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4%, 15.9% 증가
- 여기에 더해 잠시 주춤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추정 집행으로 정부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견인
 - 특히 수출의 경우 금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2014년 이후 3년만에 교역규모가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다만 상품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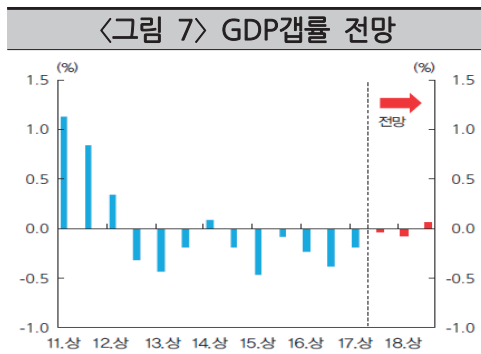
□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전망

○ 그 동안 경기회복을 이끌어 왔던 투자의 활력은 점차 둔화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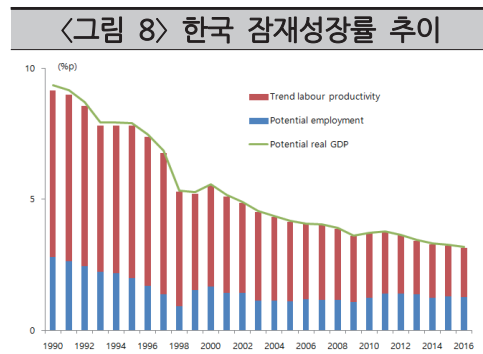
- 한국은행(2017)은 현재의 마이너스 GDP갭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 GDP갭률 = ((실제GDP - 잠재GDP)/잠재GDP) * 100

○ 다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의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



자료: 한국은행
주: 2017년 10월 전망 기준



자료: OECD STEP 99 Database

〈표 4〉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세계 경제성장률(YoY, %)	3.4	3.2	3.6	3.7
국내총생산(YoY, %)	2.8	2.8	3.1	3.0
민간소비	2.2	2.5	2.4	2.6
총고정투자	5.1	5.2	8.3	3.1
건설투자	6.6	10.7	7.6	1.4
설비투자	4.7	-2.3	13.5	5.8
수출	-8.0	-5.9	15.4	7.1
소비자물가(YoY, %)	0.7	1.0	2.0	2.1
경상수지(억달러)	1,059	987	858	811

자료: IMF, 한국은행, 통계청, 민주연구원
주: 전망치는 내부 추정 기준

○ (민간소비) 2% 중반대의 견조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

- 국제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단가 상승효과가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 및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가계 임금소득 증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이 나타날 전망
- 또한 최근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것도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다만 주택경기 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확대, 물가 상승에 따른 제한적 실질소득 개선 등은 가계의 자금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투자)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증가율이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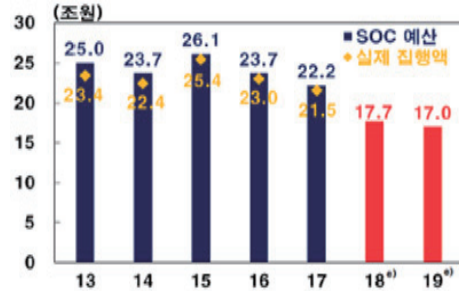
- 금년 상반기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이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내년 중 조정압력을 받으면서 증가율이 상당폭 축소될 전망
- 설비투자의 경우 조정압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등 ICT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면서 내년도에도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건설투자는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주거용 건물 중심의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신규 착공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SOC 예산 역시 상당폭 축소됨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

〈그림 9〉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자료: 한국은행, 민주연구원
 주1: 2017년 이후는 전망치
 주2: 전년대비 기준

〈그림 10〉 중앙정부 SOC 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1: 2017년 예산 집행액은 추정치
 주2: 추경 포함 기준

○ (물가) 2% 초반 수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금년 하반기 들어 가뭄과 폭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지난해 전기료 한시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
- 그러나 근원소비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1%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
- 내년에는 소비 중심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기적으로 2% 초반 수준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고용)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지만 증가폭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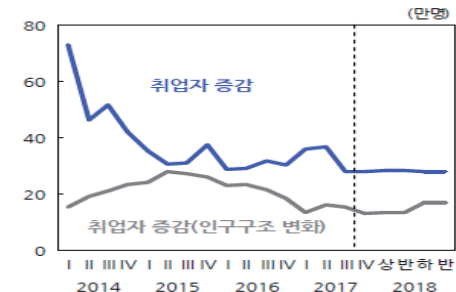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내년 취업자 수 증감은 경기적인 요인에 더해 정책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체적인 고용여건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영향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 2018년 공무원 증원 로드맵(5년간 17.4만명)에 따라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지방직 공무원 1.5만명 등이 증원될 예정
- 다만 취업자 증감은 건설경기 조정,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 인구구조 변화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금년(30만명 초반)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된 30만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그림 1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민주연구원
주1: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주2: 2017년 이후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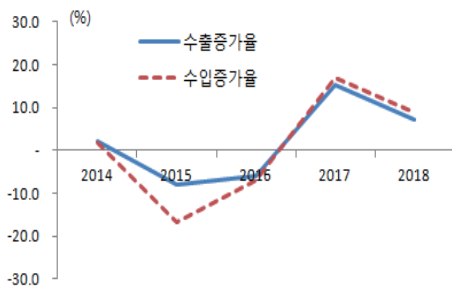
〈그림 12〉 총 취업자 수 증감 전망



자료: 정대희·김지운(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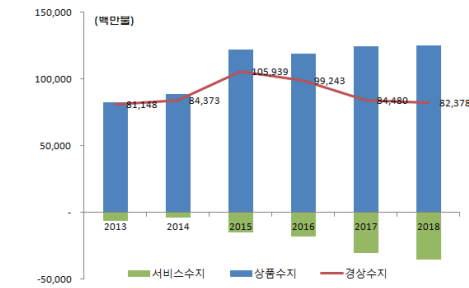
- (수출입) 세계 교역 회복 및 신흥국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수출은 세계 교역 회복과 신흥국의 수입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7%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평균 국제 유가 상승, 민간소비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약 95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교역규모는 금년에 1조 달러를 다시 넘어서고, 2018년에도 수출입 회복에 힘입어 1.1조 달러 수준을 상회할 전망
 - 다만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의 정치불안,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과 같은 불확실성은 수출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는 유지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 의해 경상수지 비중은 GDP대비 5%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다만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전망



자료: 관세청, 민주연구원
 주1: 2017년 이후는 전망치
 주2: 통관,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그림 14〉 경상수지 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민주연구원
 주: 2017년 이후는 전망치

○ (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적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

- 금년 상반기 이후 달러당 1,120 ~ 1,14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080원을 하향돌파 하면서 2년 7개월만의 최저치 기록
- 최근 원화 강세 요인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대외 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美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 美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및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환율조작국은 1)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 지속적인 시장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하며, 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는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IMF의 감시를 받게 됨
-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네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내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회복세 지속, 트럼프 행정부의 원화 평가절하에 대한 경계 등의 영향으로 대체적인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원/달러 환율의 주요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대외 경기 여건에 따라 환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표 5〉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

구분	18.1Q	18.2Q	18.3Q
Citigroup(11/17)	1,111	1,104	1,100
Barclays(11/17)	1,100	1,090	1,080
Credit Suisse(11/29)	1,100	1,110	1,117
Standard Chartered(10/30)	1,150	1,155	1,150
HSBC(9/20)	1,140	1,145	1,145
Morgan Stanley(11/27)	1,085	1,070	1,080
Nomura Bank(11/24)	1,141	1,138	1,134

자료: Bloombe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괄호 안은 전망치 발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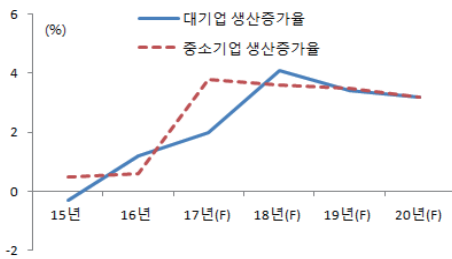
3 중소기업 경기 전망

□ 중소기업 경영환경 역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제약 요인들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

○ (제조업 생산) 중소제조업 생산은 내년에도 개선세를 이어감에 따라 경제 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 기여도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호황 등에 힘입어 2017년 1분기 이후 개선폭이 확대되는 모습
- 내년에도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 지속, 정부 정책에 바탕한 내수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증가율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경제 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그림 15〉 대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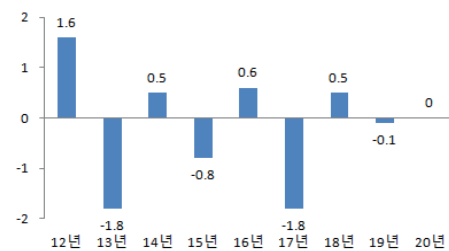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주1: 2017년 이후는 전망치

주2: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주3: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준

〈그림 16〉 대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격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주1: 2017년 이후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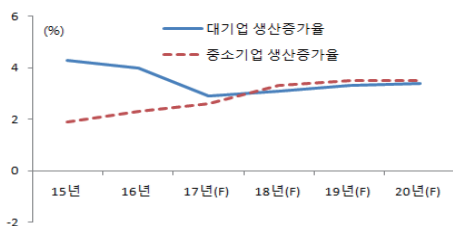
주2: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준

○ (서비스업 생산) 중소서비스업 생산 역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서비스업 생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급년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사드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내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지만,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소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 지속
- 내년에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기조가 이어지면 서 내수와 서비스업은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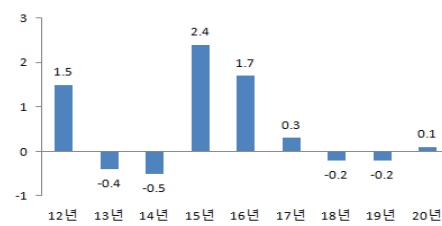
- 특히 도소매, 보건 및 사회복지 업종 등의 중소서비스업에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중소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이 대기업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그림 17〉 대중소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전망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주1: 2017년 이후는 전망치
 주2: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주3: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준

〈그림 18〉 대중소서비스업 생산증가율 격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주1: 2017년 이후는 전망치
 주2: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준

- (고용) 중소기업 부문이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높은 기여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증가 규모는 소폭 축소될 전망
 - 금년 중소기업 취업자 수 증감 규모는 약 33만명 수준을 기록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할 전망
 -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소폭 축소될 전망
- (자금사정)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사정 여건이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
 - 금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은행권의 보신주의 완화*, 매출 상승에 따른 내부 자금여력 확대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 * 은행권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9월 잔액기준 약 625.5조원 수준을 기록
 - 그러나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자산가치 변동, 대출 상환부담 확대, 자본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사정이 위축될 가능성
 - 반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4

정책적 제언

(1) 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

- 내년 투자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 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
 - 내년에도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그 동안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여 온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조정압력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수출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정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내년 하반기 이후 둔화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현재의 회복세를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얼마나 경기를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
-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동안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대체적으로 감소해왔고, 내년에도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 확대, 건설업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제약요인이 존재
 -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비율): (12) 74.1 → (13) 73.5 → (14) 72.9 → (15) 72.0 → (16) 71.4
 -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자산가치 및 소득 변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임시고용직 등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
 - 일자리, 복지 부문 등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소비심리 개선을 유도하고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
 - 최저임금 및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의 가계소득을 향상시키고 내수 소비 확대를 유도
- 또한 생활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에 대한 관리 강화
 - 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지만, 향후 국제 유가 상승, 인건비 부담 확대에 의한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이 제한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 물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유통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또한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경감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의 시기 조절 등을 통한 건설 경기 연착륙 유도
 - 그 동안 건설투자가 경기 회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상황에서 다른 내수 부문의 회복이 더딜 경우 건설경기 둔화는 경제 전체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립 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지양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
 - 이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SOC 예산을 적시에 집행함으로써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가계 소득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재설계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 이러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2)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 마련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내외 수준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 ('01 ~ '05) 4.8 ~ 5.2 → ('06 ~ '10) 3.7 ~ 3.9 → ('11 ~ '15) 3.0 ~ 3.4 → ('16 ~ '20) 2.8 ~ 2.9

-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높은 수준의 규제에 의한 혁신 제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현재 한국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이 동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
 - 또한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저해,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인한 경제 혁신 제약 등도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혁신 및 규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
 -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향상, 혁신 바우처 지원 등의 혁신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 서비스 현장에서의 IT 활용 확대, 서비스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지식서비스 활용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
 -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유망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 저임금의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서비스업 체제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
 - 그 외에 수출산업화 성장기반 확충,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

- 또한 원칙 허용 -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등 선제적 규제 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육성
 - 입법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네거티브 리스트를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개념 적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 실험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유도
 -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된 제도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 적용)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
 - 규제샌드박스 정책에 대한 추진체계의 주체를 정부 역할로 보고, 이를 활용한 신제품의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둌으로써 기업들의 혁신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ICT융합, 핀테크 등의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 국내 허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서 시장출시가 곤란한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

한국의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고고도비행(150m 이상) 등을 7개 시범공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 7개 시범공역: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
- 국토부 장관 승인으로 비행 규제 일부 면제, 자유로운 성능 테스트 허용

(3) 금리인상에 따른 한계가구 지원 대책 강화

□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대체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금리인상 속도는 대체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韓美 금리차 역전에 의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아직까지 높지 않은 만큼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또한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내년 신임 한국은행 총재 취임, 지방선거 등의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 속도는 대체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시중금리 및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여전한 만큼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

- 가계 전체적으로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도 가계소득 증가, 금융자산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출 부실화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2017)은 이번 0.25%p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연간 2.3조원(가구당 18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보유자산 가치와 소득 변화 등으로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능력이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
- 특히 경기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금융자산이 없는 한계가구에 금리 상승 부담이 집중될 수 있으며, 과다채무자 및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

□ 한계가구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경우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다중채무자 증가로 업권 간 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2금융 다중채무자 부실 확대 시 은행권으로의 부실전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내수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차주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금융상담 시스템을 확대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약차주의 금융상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
 - 또한 일방적인 대출 총량관리는 취약계층의 비제도권 대출과 이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만큼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상환능력 부족으로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연체 전 채무조정 유도,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전반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 상환불능 그룹의 경우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회생 등을 통한 법적절차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 사례

-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등의 맞춤형 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변호사선 임비 30만원) 및 파산관재인비용(30만원) 지원
- 채무상담: 수입·지출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채무설계 실시
- 복지연계: 일자리지원·자활센터, 민간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중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적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금리상승 및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부실 리스크를 감소시킬 필요
 - DTI(Debt to Income)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차주의 소득*을 보다 잘 반영하여 부채 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한편, 전체 부실 가능성은 완화
 - * 저연령층 상환능력 평가 시 장래소득을 함께 고려하고, 신호부부의 경우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화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별로 고DSR 대출을 집중 관리하도록 유도
- 그 외 건설업 경기 둔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임시고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일자리 안전망 확충할 필요

(4)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

- 경제 성장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환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
 - 최근 원/달러 환율의 달러대비 절상률*이 주요 통화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전반적인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
 - * 달러대비 주요 통화 절상률(% , 17.1.3일 대비 11.23일 기준): 원화 10.9, 파운드화 8.7, 싱가포르달러 7.8, 대만달러 7.7, 엔화 5.9, 위안화 5.8
 - 환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전가율이 낮고 수출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환변동으로 수익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나친 환율 쏠림현상 방지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
 - 우선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환헷지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30% 이상이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한국무역보험공사, 2017)
 - 급격한 환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환헷지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특히 과거 키코(KIKO)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의 환헷지 상품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화옵션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고정환율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물환이나 환변동보험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키코(Knock-In, Knock-Out) 사태

- 키코란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하여 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환헷지 통화옵션상품을 의미
- IMF 사태 이후 평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수출기업에 해당 상품을 적극 판매하였으나,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은 오히려 은행에 막대한 환차손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도나 상장폐지에 직면한 기업들도 발생
- 손해 기업들은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3년 8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키코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지만 설명위무 위반으로 은행에 일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표 6〉 선물환 및 환변동보험 비교

구분	선물환(Forward)	환변동보험
거래주체	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
계약환율	은행 선물환율	은행 평균 선물환율
비용(1년 기준)	선물환율에 마진 포함	보험료(0.04%p 내외)
증거금	신용도에 따라 요구	없음
최소금액	통상 USD1만 이상	제한 없음
거래한도	신용도에 따라 제한	수출(입) 실적 기준
손익정산	실물인도 원칙	차액정산 원칙
거래기간	통상 1년 이내	최장 5년(수출거래)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친 환율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체계적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적절한 변동성 유지를 통한 거래량 확대 및 국내 장단기 금융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충격흡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
- 환율조작국 지정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거시건전성 체계를 구축하여 대외신뢰도를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부표1: 2017-2018 기관별 한국경제 전망(%)

구분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실업률	
	17	18	17	18	17	18	17	18	17	18	17	18
IMF	3.2	3.0	-	-	-	-	-	-	-	-	-	-
한국은행	3.0	2.9	2.3	2.6	14.0	2.8	6.9	0.2	14.6	3.2	3.8	3.8
국회예산정책처	2.9	2.8	2.3	2.5	10.5	3.7	6.3	-1.8	12.9	3.1	3.8	3.8
한국금융연구원	3.1	2.8	2.4	2.6	13.4	3.4	7.8	-0.9	13.3	3.1	3.8	3.9
한국경제연구원	2.8	2.7	2.2	2.2	12.2	2.4	6.7	-0.8	14.0	5.4	3.8	3.9
IBK경제연구소	3.0	2.7	2.3	2.6	14.1	5.1	8.2	5.6	15.1	4.1	-	-
현대경제연구원	3.1	2.8	2.3	2.5	13.8	4.6	6.8	1.0	15.7	6.2	3.8	3.8
LG경제연구원	2.8	2.5	2.2	2.6	13.3	4.3	7.1	-0.6	15.9	5.9	3.8	3.7
KDI	3.1	2.9	2.4	2.7	14.7	3.0	7.2	0.4	13.1	6.6	3.8	3.7
중소기업연구원	3.1	3.2	2.4	2.6	13.5	5.8	7.6	1.4	15.4	7.1	3.8	3.7

자료: 기관별 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시점: IMF(11.14), 한국은행(10.19), 국회예산정책처(9.28), 한국금융연구원(11.1), 한국경제연구원(9.27), IBK 경제연구소(11.6), 현대경제연구원(12.8), LG경제연구원(10.12), KDI(12.6), 중소기업연구원(11월 초)

부표2: 주요 전망 기관별 성장 기여도 추정

구분	2018년 기여도			
	KDI	KIF	KERI	KOSBI
민간	1.2	1.2	1.1	1.2
건설	1.1	1.2	1.0	1.2
설비	1.3	1.2	1.1	1.2
수출	1.3	1.6	1.3	1.7
수입	3.6	3.8	3.1	3.7
순수출	-2.3	-2.2	-1.9	-2.0

자료: 각 기관별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참고문헌 •

- 관계기관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10.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파의 길잡이 나왔다, 2017.10.18.
-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7.9.
- 김도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1(8), 2017.
- NH투자증권, 2018년 경제전망, 2017.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화 균형환율 추정 및 원화 강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7.12.
- 박정수·최봉현·이상호, 서비스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11.12.
- IBK경제연구소,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2017.11.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2017.12.
- LG경제연구원,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2017.10.
- 정대회·김지운,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17.12.
- 중소기업연구원, 2018년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기업 경기 전망, 2017.11.
- 최해옥, 규제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7.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 경제·원자재시장 전망, 2017.12.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2017.12.
-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경제·금융 동향과 2018년 전망, 2017.11.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7.10.
-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017.12.
- 관세청: www.customs.go.kr
- 기획재정부: www.mosf.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ww.stlouisfed.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ww.eia.gov

